

브리핑·질의응답 통해 접근성·정주여건 등 꼼꼼히 따져

한전공대 후보지 실사 마무리

한전공대 입지 선정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후보지 6곳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된 24일 각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은 현장을 찾아 손팻말을 들고 한전공대 유치 희망 의지를 알리는 등 안간힘을 썼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정주여건, 산학연결 러스터 접근성, 지역 대학과의 협력 계획, 인근 부지의 장기 발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실사에는 한전 용역사 19명의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 2명 등 총 21명이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오전 광주지역 후보지 중 북구 첨단3지구,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남구 승촌보 등 총 3곳을 방문했다. 광주지역 해당 후보지역 지자체들은 후보부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인근 아파트와 건물 옥상 등지에서 1차 브리핑을 한 뒤 해당 부지에서 2차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현장에서 접근성, 정주여건, 사회 간접자본시설 인프라, 산학연계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북구청은 첨단 3지구를 소개하기 위해 인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아파트 옥상에서 1차 브리핑을 진행했고, 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가 공동학점 이수제 등 지역 대학과 한전공대의 시너지 효과를 집중 소개했다. 북구에서는 후보지를 조망하기 위한 건물 옥상에 망원경까지 마련하는 등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또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인근 주민 300여명은 현장에서 심사위원을 맞으며 '한전

부지 조망 옥상 망원경 동원

6곳 지자체 강점 내세우며 홍보

주민들 손팻말 들고 유치 호소

공대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고, 남구 승촌보에서 진행된 현장실사에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 등의 강점을 내세웠다.

이어 심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나주시에 위치한 부영CC, 산림자원연구소 등 3곳의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돌아봤다. 심사위원들은 전남지역 후보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변 건물 옥상 등에 올라 현장을 살펴보고, 30여분씩으로 각 지자체의 현장브리핑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심사위원들은 나주 부영CC 현장실사에서 골프장부지 활용계획 등을 따져 물었고, 산림자원연구소와 농업기술원 등지에서 진행된 현장실사를 통해 정주여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뒤늦게 후보지로 알려진 부영CC 실사에서는 '대학이 유치될 경우 나머지 골프장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지역민의 관심도 뜨거웠다. 실사 소식을 들은 지역민들은 실사 현장 주변에서 심사위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다. 또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한전공대 부지 선정 축하 문화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유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 후보지 3곳 모두를 전남과의 접경지로 추천했고 지역대학과의 시너지 효



한전공대 부지 실사가 진행된 24일 광주남구 주민 300여명이 대촌 에너지밸리현장 입구에서 현장실사를 마치고 떠나는 심사위원들을 환송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과에서도 최적으로 꼽힌다"면서 "광주시민과 단체장들이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열망을 갖고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나주시역 추천부지는 국공유지가 다수 포함돼 애초 목표인 오는 2022년 개교가 가능하다"면서 "한전공대를 혁신도시 인근에 유치하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혁신도시 시종 2'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한전공대 설립 맞춰 IT·에너지 특목고 설립

나주혁신도시에 2021년 개교

전남도교육청이 한전공대 설립에 맞춰 나주 혁신도시에 IT·에너지 관련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021년 개교를 목표로 가장 '혁신 IT 에너지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고교는 IT·에너지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전문화

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22년 설립될 한전공대 IT·에너지 교육과정과 연계해 대학에서 배울 기초·기본과정도 가르친다. 나주혁신에너지밸리와 연계해 방과후 산·관·학 협력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나주혁신도시에는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업, 나주 에너지 밸리, 혁신산단 등 다양한 IT, 에너지, 환경 관련 직업 인프라가 마련돼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전남과학교육원과 나주소프트웨어체험센터(건립 중) 등 IT관련 교육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손현숙 과장은 "나주혁신도시에 한전공대가 유치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남도교육청도 한전공대 설립에 발맞춰 '혁신IT에너지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인프라 강화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당정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법안 2월 국회 처리"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엘리트 체육시스템 개선 등 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2월 임시 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으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

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아울러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소멸시효를 아예 정지하는 특별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당정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적주의 기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논의할 주요 과제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또한 당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신고된 성폭력 피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 대통령 "예타면제, 균형발전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한 뒤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비중을 많이 하도록 기준을 바꿨음에도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이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전국경제투어로 대전을 방문, 대전의 명물 성심당 빵집에서 튀김 소보루를 구매 후 직원들로부터 깜짝 생일 축하 케이크를 받은 뒤 촛불을 끄고 있다. /연합뉴스

업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업들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예타조사 면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추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